



## 일본 총선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jung@kiep.go.kr](mailto:jung@kiep.go.kr), Tel; 3460-1202)

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위원 ([eunji@kiep.go.kr](mailto:eunji@kiep.go.kr), Tel; 3460-1035)

### 주요 내용

- ▣ 9월 11일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정사업 민영화를 주요 이슈로 내세워 절대적 압승을 거둬으로써 고이즈미 총리는 향후 구조개혁노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 금번 선거에서는 우정사업 민영화, 재정개혁, 공무원개혁, 공적 금융기관 통폐합, 대북 경제제재 도입, 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유권자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 고이즈미 총리는 안정된 정치기반을 토대로 우선 우정성 민영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보다 철저한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일본의 경기회복은 우리기업의 수출 및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기회 증대, 관광수입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일본기업 경영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자민당 지지자들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선거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일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강화와 더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우리정부는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한·일 FTA협상을 위한 대화를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양국의 정치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의 경기회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임.

## 1. 선거 결과 및 요인 분석

- 2005년 9월 11일 실시된 제44회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우정사업 민영화를 주요 이슈로 내걸면서 절대적 압승을 거두었음.
  - 자민당은 단독으로 절대적 안정다수의석(269의석)을 크게 상회하는 296의석(점유율 61.7%)을 확보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하여 327의석(68.1%)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음.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前에 비해 64석이 모자라는 113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하였음.
  
- 금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는 고이즈미 총리의 단기적인 선거전략이 크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즉 대립구도를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으로 압축하고 기타의 정책이슈를 쟁점에서 철저히 배제한 선거전략이 크게 효과를 보았음.
    - 고이즈미 총리는 금번 선거에서의 이슈로서 “우정사업 민영화” 하나로 승부를 걸었음. 연금제도, 세계개혁, 의료개혁 등 다수의 정책현안을 희석시키면서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핵심이슈로 활용하였음.
  - 둘째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속적인 구조개혁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매우 탄탄하였기 때문임. 단기적인 선거전략과 더불어 고이즈미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노선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었음.
    - 일본 경제계는 금번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음.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노선에 대한 경제계의 지지가 매우 강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국민들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가 금번 투표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셋째는 전통적 정치인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실망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일본국민의 열망이 고이즈미 총리의 압승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총리가 보여준 정치스타일에 일본국민들은 매료되었고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었음. 금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일본국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2. 주요 선거이슈와 향후 개혁노선 전망

- 금번 선거에서 표출된 각 정당의 정책공약은 [표 1]과 같음. 이러한 공약 중에서 일본의 구조개혁 및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큰 정책사안들로서는 △ 우정사업 민영화 △ 연금개혁 △ 세입증대 및 세출삭감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 △ 공무원 정원감축 및 임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 △ 공적 금융기관의 통폐합 △ 대북 경제제재 도입가능성 고조 △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들 수 있음.
  -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은 금번 선거의 압승을 바탕으로 9월 말경에 특별국회에 상정하여 10월 중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고 참의원에서 반대하였던 의원 중 상당수의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성립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 우정사업 민영화를 통해 일본 금융시장의 왜곡된 자금흐름구조를 혁파하고 재정건전화, 공정한 경쟁조건의 정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이로써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의 핵심부문, 즉 비효율적 자금의 출구와 더불어 자금의 입구까지 개혁하게 되어 일본 금융시장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될 것임.
  - 세수증대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도 향후의 중요한 정책사안임.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기간 중에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세율인상은 2007년 이후에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세출삭감을 위하여 공적지출이 매우 큰 연금 및 의료부문에서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연금감축, 의료비의 개인부담 증가 등이 그 핵심으로 이에 대해서도 뜨거운 찬반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 공무원 정원감축 및 임금삭감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임. 이에 대해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관료조직 그 자체에도 개혁의 메스를 가하려 하고 있음.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개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한·일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는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발동, 헌법 개정이 있음.
    - 일본정부는 일본인 납치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매우 민감함.
    - 헌법개정을 통하여 군대 보유 및 국제적인 군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총선 승리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주둔 자위대의 주둔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러한 정책노선은 우리 정부 및 주변국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이러한 민감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표 1. 각 정당별 총선거 주요 정책 현안

	자 민 당	공 명 당
우정사업 민영화	· 참의원에서 부결된 민영화법안 다음 국회에서 성립	· 선거 이후 민영화 법안 성립을 위해 만전을 기울임
연금	· 공무원을 포함한 봉급자 연금제도 통합 추진 · 비정규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 불안제거를 위해 후생, 공제연금의 통합 추진 · 의원연금 폐지, 당분간 국고부담 및 수급액을 감액
재정 · 세제 개혁	· 2010년 초반에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 정부세제조사회 의 봉급자 증세를 수용하지 않음. · 2007년도를 목표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 사업을 분할하여 세출삭감에 착수 · 2007년도를 목표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행정개혁	· 중앙정부와 지방 공무원 삭감과 총 인건비 삭감 · 정책금융은 2008년도까지 개혁 실시	·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을 합하여 총인원 수 10% 삭감 · 市町村 합병을 통하여 1,000 지자체 추진
외교 · 안보	· 국제협력을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규정하는 자위대법 개정 · 북한경제제재 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	· 이라크 인도적 부흥 지원을 지속 · 북한의 납치, 핵문제 해결에 전력, 경제제재 발동 고려 · 아시아 각국과의 FTA
헌법개정 · 정치개혁	· 11월 15일까지 헌법초안 공표 · 국민투표법을 조기 제정 ·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 現헌법에 환경권 등 새로운 조문을 추가 · 자위대 존재와 국제적 공헌 등 논의 대상으로
의료 · 자녀수 감소	· 新고령자의료제도, 의료계획제도 개혁법안을 차기 통상국회로 제출 · 아동수당과 자녀육성 지원세제 검토	· 아동수당대상을 중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의료비 20% 부담 대상자를 3세 미만에서 6세까지로 확대

자료: 日本經濟新聞(2005. 8. 20), 「自民公明民主のマニフェスト」를 참고로 작성

■ 한편 총선 이후 일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 126개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영자들은 향후의 최대의 정책과제로서 “연금, 의료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문제”를 들고 있음. 그 이유는 기업의 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아 이것이 기업경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조사에서 일본 기업경영인들은 자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해 기업경영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과제

중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다섯번째 순위의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표 2. 기업경영자가 제시한 상위 5대 정책과제

순 위	정 책 과 제
1	연금, 의료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개혁
2	소비세 인상 등 재정개혁
3	규제완화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4	공무원 정원 등을 포함한 행정개혁
5	중국·한국 등과의 외교문제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5.9.13. 1면, 11면 참고)

### 3.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금번 선거에서 압승한 결과 한·일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번 선거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의 압승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음. 첫째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각이며, 둘째는 이와는 정반대로 양국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시각임. 필자는 후자의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보수화·우경화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악화임.
- 자위대법 개정,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발동 가능성 고조, 헌법 개정의 가속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주변 국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민당의 압승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향후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금번 총선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관계악화의 이유로 제시될 수 있음.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압승은 향후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정치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의 정권기반이 더욱 공고화되어 주변국에 배려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음.
  -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가 아시아 주변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던 것은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임. 금번의 선거결과, 자민당은 전통적인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음. 이로써 자민당의 지지기반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자민당은 수구·보수의 이미지로부터 개혁정당으로 극적인 변신을 꾀하였음.
  - 또한 금번 선거는 전통적인 파벌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선거였음. 금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였고 젊은 층으로의 세대교체, 여성의원의 대대적 진출 등으로 전통적인 파벌정치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됨.
  - 이와 같은 자민당의 성격변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기반 강화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의 배려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임. 자민당은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중국 및 한국과의 외교문제를 고이즈미 정권이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외교문제에 따르는 경제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기업경영자들 사이에서 분출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를 고이즈미 정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임.
- 둘째, 경제적으로는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점임. 금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개혁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일본정부의 정책기조가 안정화되어 대외적으로도 일본경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임.
  -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의 총선 승리 이후 일본의 주식·외환 시장에서는 주가상승, 엔고로 화답하고 있음. 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는 고이즈미 개혁노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금융계와 택배 관련 업계에서도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시장은 확실히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노선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회복기조로 돌아서 있으며 2004년에는 설비투자가 무려 26.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의 설비투자도 전 산업 11.6%, 제조업 19.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3.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단위: 억 엔,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 산업	388,962(8.6)	365,023(-6.2)	297,479(-18.5)	316,319(6.3)	400,722(26.7)
제조업	132,383(18.6)	112,915(-14.7)	90,390(-19.9)	96,835(7.1)	129,819(34.1)
비제조업	256,579(4.0)	252,108(-1.7)	207,089(-17.9)	219,484(6.0)	270,903(23.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법인기업통계』

-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향상되어 투자, 고용조건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4년의 경상이익은 44조 7천억 엔으로 버블기의 피크를 이루었던 1989년의 39조 엔을 훨씬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표 4. 일본기업의 경상이익 추이

(단위: 억 엔,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 산업	358,660(33.2)	282,469(-21.2)	311,049(9.8)	361,989(16.8)	447,035(23.5)
제조업	164,259(45.4)	106,166(-35.4)	121,391(14.3)	150,863(24.3)	194,725(29.1)
비제조업	194,401(24.4)	176,303(-9.3)	188,658(7.0)	211,125(11.9)	252,310(19.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법인기업통계』

-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볼 때, 일본경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기회복은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기회 증대, 관광수입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일본의 경기회복을 활용하기 위한 양국간 관계 개선노력이 우리측에도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스타일로 볼 때, 양국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조정형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톱다운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식의 리더형 정치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양국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일본기업 경영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자민당 지지자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선거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한·일 FTA의 경우, 양국간 FTA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이 강력한 FTA 추진체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권력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총리주도의 FTA 추진체계가 정비된다면 한·일 FTA협상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각 성청의 이해대립을 혁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임.
- 결국 자민당의 정치기반 강화, 일본경제의 체질 강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강화 등의 요인으로 한·일 정치·경제관계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첫째, 양국 경제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한·일 FTA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함.
    - 한·일 FTA협상은 현재 거의 1년 가까이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한 확대되는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고이즈미 총리의 압승을 계기로 일본 내에 강력한 FTA 추진체계가 정비된다면 농업부문에서의 양국간 교섭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어 한·일 FTA 체결을 위한 대화를 조심스럽게 재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본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는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국내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일본기업에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업차원에서는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동시에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기존의 제품 및 사업영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매우 요구되고 있음. 특히 부진한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업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 셋째는 냉각되어 있는 양국의 정치관계를 신속히 회복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연장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2006년 9월의 임기만료 후에도 총리로 재선될 가능성이 있음. 한마디로 말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치·외교관계 개선은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